

데스크 시각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인구 2만여 명의 강원도 양구군은 요즘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양구 출신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 생가 터에 들어선 '박수근 미술관'을 둘러보기 위해 이달 초부터 방문객들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박수근 미술관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된 건 바로 '이건희 컬렉션' 덕분이다. 지난달 28일 고(故) 이건희 삼성회장 유가족이 기증한 유화 4점과 드로잉 14점을 공개한 특별전 '한가한 봄날, 고향으로 돌아온 아기 업은 소녀' (5월6일~10월17일)를 '직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예년보다 2~3배나 많은 관람객들이 찾고 있는 것이다.

분주한 대구, 너무 조용한 광주

대구미술관 역시 최근 '갑작스러운' 특별전 준비에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다른 미술관들이 코로나19로 예정된 전시회를 연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올해 전시 일정에 없었던 '이건희 컬렉션'을 선보이는 '헬릭스' (6월29~8월29일)전을 기획한 것이다. 이 회장 유족으로부터 대구 출신 이인성 화백의 작품 등 한국 근대미술 12점을 기증받은 후 별도의 상설전시실을 확보했다. 당초엔 오는 12월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일정을 앞당겼다고 한다.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1488점을 품어 안은 국립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다. 컬렉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자 내년에 열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오는 7월 덕수궁관에서 먼저 일부 작품을 선보일 예정

은편칼럼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며칠 전 신문에서 '환경부, 내후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라는 표제(表題)가 눈에 들어왔다. '내후년'은 과연 언제일까? 다가오는 연도는 '금년(올해)-내년-후년-내후년' 순으로 해아리기에 2024년을 염두에 뒀는데, 기사 본문에는 "이번 법률 개정 시행령은 내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 4월에 이뤄진다"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 50~1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폴락티크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 분해에 50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폐기물 부담금을 통해 단가를 올려,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친환경 아이스팩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알리는 게 보도에 함축된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내후년의 뜻도 모르고 기사를 썼다고 비난하면 될까. 아마저도 어설픈 지식의 잣대로 괜한 트집 잡는 억지 춘향 아닐까.

기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내후년'을 '후년의 바로 다음 해'로 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언중

기고



김하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 시기부터 갈등과 대립 관계에 들어간 미·중은 아직도 예전의 상호 화해적 교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도 중국 견제라는 면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해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폭이 증가해 온 미국은 2012년부터는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 왔고, 2017년에는 3752억 달러에 달해 최고치에 이르렀다.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적자폭이 커다란 문제였고, 이를 관세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화웨이 사건 등을 위시하여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는 조치까지 시행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점차 중화되어 최근에는 무역 시위가 대만해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국도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항하는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무역전쟁이 점차 외교 대결, 군사 대결로까지 치닫는 형국이다. 최근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

슬기로운 '이건희 컬렉션' 사용자

이다. 이어 오는 8월엔 서울관에서 총 3부로 나뉘 내년 3월까지 테마별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처럼 최근 국내 문화예술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건희 컬렉션'이다. 이 회장의 유족으로부터 작품을 기증받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릴 정도다. 급기야 이건희 컬렉션의 향방을 놓고 지자체들 간에 치열한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장의 기증 정신을 살리고 좋은 작품을 국민이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오면서 부산·대구 등 20여 곳의 지자체들이 삼성가의 인연 등 온갖 '스토리'를 앞세워 미술관 유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대구시다. 고 이 회장의 출생지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대구는 특별전 '헬릭스'를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로 꾸린 유치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간송미술관의 전통미술과 대구시립미술관의 현대미술 및 지역 근대미술(이건희컬렉션)을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시각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이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이건희 컬렉션' 모시기와 달리 광주시의 행보는 참으로 느긋하다. 아니 너무나 조용해서 이상할 정도다. 삼삼오오부터 오지호·이중섭·김환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5명의 작품 30점을 기증받은 광주시립미술관은 언론에 기증작 리스트를 공개한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다른 미술관들이 기증작들에 대한 '브랜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 반해 개관 20주년인 내년 8월에야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올해 전시 계획이 모두 확정된 상황에서 예정에 없는 전시회를 일정에 끼워 넣는 건 예산 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의 시립미술관 규모로는 이건희 컬렉션을 위한 상설 공간 마련도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1년

후에나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건 한가해도 너무나 한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데 말이다. 더욱이 대구 등 다른 도시들의 이건희 컬렉션을 벤치마킹해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자산으로 키우려는 '장밋빛 비전'도 찾아볼 수 없다.

'리움미술관' 분관 유치 어떤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넘어간 2만 3000여 점의 컬렉션을 지자체에 다시 나눠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세기의 컬렉션'으로 불리는 이건의 소장품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비전과 의지조차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최근 미술계 일각에서 이건의 컬렉션을 계기로 한때 지역의 핫이슈였던 '삼성미술관 리움(리움미술관) 분관 유치에 다시 나서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1만5000여 점에 달하는 리움미술관 컬렉션은 굿모닝북보살반가사유상(국보 제118호) 등 다수의 국보와 보물 및 아나니 카푸어·루이스 부르조아·제프 쿤스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돼 있다. 만약 리움분관이 광주시 남구 용산동 일대로 옮겨 가는 동부경찰서 자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들어선다면 대인예술시장이나 예술의 거리와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청사진을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광주는 비엔날레 개최 도시인 데다 국립 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라는 확실한 대의명분도 있지 않나. 무엇보다 광주에 오는 이건의 컬렉션이 도시 브랜드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시는 지금부터라도 긴 호흡으로 리움분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문화 광주'의 장밋빛 미래는 쉽게 오지 않는다.

'내후년'을 트집하다 보니

(言察)이 '내년의 다음 해' 즉, '후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보니, 올해 4월 12일자로 '올해의 다음다음 해'로도 사용된다고 뜻을 추가하였다. '날모래(내일모래)'가 '모래'와 동의어어듯이 '내후년'도 '후년'과 같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한데 사전적 정의를 추가한 까닭은 무엇일까. 언어는 개념을 담는 그릇이고, 언어생활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언어라는 도구가 잘못되면 개인의 삶과 사회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니 올바른 언어를 이해하고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표준국어대사전의 역할일 텐 데, 2년 뒤도 내후년이고 3년 뒤도 내후년이라 하면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렇지만 단어의 뜻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것은 언어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표면적인 의미만으로 단순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 고흡수성수지의 '수지(樹脂)는 원래 소나무 따위의 나무에서 분비하는 점도가 높은 액체인 나무진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전쟁은 지옥이다(War is Hell)"는 표현도 좋은 예가 된다. 이 말에서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중요성을 떠올리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윌리엄 셔먼(William T. Sherman) 장군이 "전쟁을 통해 남군이 지옥을 맛보게 하겠다"며 남군의 도발에 대한 응징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렇듯 상황과 맥락 속에서의 다양

한 해석 가능성 또한 언어의 특징이기에, 이를 외면하면 다양한 역측을 낳을 수 있다.

문해력(文解力, literacy)은 글자를 읽거나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문장을 맥락 속에서 실제로 이해하는 능력이다. 세종대왕 덕분엔 문맹률은 1% 이하인 우리나라지만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거나 최소 중간 이하라는 게 중론이다.

이런 일화가 있다. 고등학교 사회 수업 시간에 교사가 영화 '기생충'을 소개하며 "이 영화의 구성 초기에 가제는 데칼코마니였대요. 가제가 뭐야, 아는 사람?"하고 물으니, "랍스터요"라고 한 학생이 대답하였다. 얼마 전 방영된 EBS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다. '기'와 '이'를 혼동해서 '가제-랍스터'를 연상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 맥락에서는 가제가 등장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 영화를 통해 기득권, 위화감 등의 용어와 함께 사회 불평등 현상에 접근하려면 교사의 당혹스러움은 익히 상상이 된다.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담화의 맥락을 읽지 못하고 어휘나 상황 하나에 집착해 비판하고, 나아가 진영 논리로 비화되는 사례를 자주 발견한다. 혐오스러운 허언(虛言)으로 구축자 수를 늘리려는 매체를 보면, 낮은 문해력을 역이용하는 게 쉽기도 하다. 문해력은 지식의 정도보다 가치관과 태도의 영향이 크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겠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태도나 혐오를 극복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다.

미·중의 대립 관계와 한국의 대응

스자이나모닝포스트는 현재 중국과 대만의 위험 지수는 7.21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이 내전을 치렀던 1950년대의 위험 지수 6.7을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수치는 그만큼 양측의 무력 충돌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고위 관리들의 대만 방문 및 무기 판매가 이어졌고,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대만 정부에 중국이 깊이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해 초 뱅크오브아메리카는 6~7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이며, 중국 경제가 연 평균 4.7% 성장해서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2020년 중국의 GDP가 14조 7000억 달러로 미국의 70.3%에 달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예측이 예측으로 끝나지 않을 듯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고서는 1위 국가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중 간에 이러한 패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중국 패리기로 오히려 한국이 득을 보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경우 G2 국가들의 긴장 관계는 우리에게 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활발하지 않고 자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은 무시하기 어렵다. 사드 이후 한·중 교류가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입은 타격은 수출에 그치지 않고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한 무역의 수치 급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국 경제가 중국 경제와 너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걱정도 있으나, 지정학적 위치나 글로벌 추세를 볼 경우 중국을 무시하고 우리가 발전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더불어 북핵 문제를 위시한 남북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개최된 양국 정상 회담의 결과는 많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고, 한국의 대중 외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부정적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도 있어서 다행이기도 하다.

우리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안도감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아니다. 중국은 현재 변화·발전하며 진화하고 있으며, 현재의 리더십이 급격히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없다. 또한 우리의 경제, 문화, 외교와 국방, 그리고 학문 영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올바르게 대응을 하지 않고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보다는 냉정한 판단과 주체적 대응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社說

문제 많은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 막아야

투기자본인 맥쿼리자산운용(이하 맥쿼리)이 광주 지역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옛 해양도시가스)를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맥쿼리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운영사는 껍데기로 만들었으며, 시민들에게 수익률 이상의 요금 부담을 전가하고 광주시로부터 지원금을 챙긴 바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2018년 GS에서 운영하던 해양에너지는 사모펀드 회사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이하 글랜우드)로 매각됐다. 그러나 글랜우드는 인수한 지 3년 만에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던 해양에너지를 다시 매물로 내놨다.

맥쿼리와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해양에너지 매각 가격은 82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글랜우드는 3년 만에 2000억 원의 차익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참여자치21 및 광주 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투기자본의 해양에너지 인수 반대와 시민적 통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보다 신중하게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자치구를 해제해 달라고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산권 침해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내세워 찬성한다는 측과 투기 억제에는 물론 과도한 아파트 값 상승을 막기 위해 유동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광주 5개 자치구 전부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난 1월 주택법 개정으로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를 6개월마다 다시 심의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지정 해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리 높지 않은 동구와 서구 등에 대해 해제 건의 여부를 검토하고

위한 대책위'는 어제 성명을 내고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시가스가 어떤 규제 장치도 없이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해양에너지 운영과 매각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매년 100억 원 넘게 발생하는 배당이익과 매각 때마다 수천억 원씩 시세차익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막대한 이익을 결국 투기자본이 가져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소속 노동자를 위주화함으로써 고용환경이 더욱 나빠지게 됐다는 점에서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한다면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에너지 전문기관이 회사를 운영해야 마땅하다. 또한 오로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투기자본이 도시가스 독점 공급권을 쥐게 될 경우 이용자 인 시민 편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맥쿼리의 해양에너지 인수는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 등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거나 "부동산 가격이 낮은 곳에 사는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최근까지 무려 46주 연속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한 투기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부동산 시장에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집값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외부에서 정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주택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서는 더욱 그렇다.

無等鼓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국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1979년 한국과 미국이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이 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과 부품을 한국에 지원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 통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42년 만에 최대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돼 사실상 한국도 미사일 주권 확보하게 된 것이다.

최대 사거리가 180km로 제한됐다. 겨우 평양까지밖에 날아가 수 없는 사정거리로 제한한 셈이다. 그러다가 2001년 300km로 개정됐고, 2012년엔 800km로 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사정거리를 늘리지는 못했지만, 대신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 수 있었다. 이번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 기술과 관련한 모든 제약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이제는 자유롭게 미사일 연구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앞으로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2년 만에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찾아왔지만 여전히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은 미국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이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휘관이 작전 계획이나 작전 명령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다. 한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국방의 자주권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전작권

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갖고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른 나라 손에 맡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 군사 강국이다. 따라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 국민 안전과 국가 방위를 스스로 지켜 낼 수 있는 힘도 있다. 미사일 주권 확보에 이어 이제 전작권 환수를 통해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할 때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